

양안 연구의 새로운 초석

[서평] 김건태(2018), 『대한제국의 양전』, 경인문화사, 273쪽.

이 민 우*

1. 머리말

김건태 선생님께 책을 받았을 때의 첫인상으로 서평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18년 가을에 새로 나온 책을 주시겠다고 해서 연구실에서 처음 책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책이 무척 얇다는 것이었다. 책의 분량이 적다는 인상을 제일 먼저 받았던 이유는 아마도 이 책이 나오기까지의 연구 과정에 들어간 시간과 노력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까닭에 연구서가 나온다면 꽤 많은 분량이라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그 인상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적은 분량으로 책이 출간된 데 대해 적지 않게 놀랐던 것 같다.

그렇게 책을 받아들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도 다시 한 번 놀랐다. 이번에는 책의 구성이 기대했던 것과 꽤 달랐기 때문이었다. 조선 시대 농업과 양안에 대한 획기적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해 온 저자가 광무양안이라는 한국사학계의 매우 논쟁적인 주제에 관해 단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행본을 출간한다고 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구성이었다.

『대한제국의 양전』이라는 제목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특별한 의미 부여와 규정 없이 ‘대한제국’과 ‘양전’이라는 두 단어만으로 제목을 붙인 이 책은 광무양안과 토지조사사업,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대한 소개와 광무양안의 전개 과정, 전체 현황, 자료적 특징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제공하지 않는다. 10쪽이 채 안 되는 분량의 「서론」에서 광무양안 연구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밝히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연구의 사정을 간략히 제시한 뒤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연구방법론을 소개한다.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연결하는 JigsawMap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연구방법론 역시 평가가 이 책이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다면 꽤 낯설게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연구방법론에 이어지는 3장에 걸친 본론은 8개 지역의 광무양안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는데, 각각의 장은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의 분석내용과 이에 대한 저자의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이공계열의 실험보고서를 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리고 광무양안과 토지조사사업을 비교하는 결론은 솔직히 선문답과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로 갑작스러웠다.

책의 내용과 의의가 아니라 책에 대한 첫인상을 앞세운 까닭은 많지 않은 분량의 이 책을 읽는 경험이 결코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마도 저자가 광무양안에 대한 오랜 연구의 성과를 이와 같은 형식으로 묶어낸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광무양안 연구는 한국사의 전개 과정과 근대 이행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사안인 동시에 한국사학계 전체를 통틀어도 손에 꼽힐 만큼 첨예한 논쟁이 벌어진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광무양안과 관련된 연구들은 오래 연구사에 대한 정리와 함께 저자가 연구사에서 어떠한 입장에서 서 있는지를 꽤 긴 분량으로 서술하고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대개는 조선 후기 경자양전에서 일제시기 토지조사사업에 이르는 역사에서 광무양전사업이 갖는 의의와 성격에 대한 총론으로 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¹⁾

이러한 일반적인 구성은 독자들이 연구사의 맥락 안에서 저자의 입장을 감안하면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독자를 기존 문제의식의 틀 안에 가두고 자료에 대해 선입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저자가 한국경제사의 기본적인 쟁점과 구도들의 한계를 벗어나는 창의와 발상으로 학계에 크게 기여했으며, 기존 광무양안 연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입장에서 자료의 성격과 특징의 정확한 이해를 강조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제국의 양전』은 의도적으로 일반적인 구성을 피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책에서 제시하는 광무양안의 구체적 실상을 직접 대면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이 책을 평가가 추측한 저자의 의도대로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은 도처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떠올리지 못한 문제와 쟁점들에 대한 해답을 연이어 쏟아낸다. 책 중간에 등장하는 윗판과 윗말 없이 머릿속에 윗판을 그려놓고 대화를 통해 윗을 노는 할머니들처럼 말이다. 머릿속에 연구사와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그려 놓고 문장을 따라갈 수 없는 평자는 빈 서판에 글을 새로 새기듯 책을 읽지 못한 채 기존 연구의 맥락을 계속 상기하며 독서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글은 어찌면 저자가 피하라고 제안한 방식으로 책을 읽은 경험을 적은 것일지도 모르겠다.²⁾

1) 관련 주제에 대해 최근에 출간된 왕현중(2016),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과 양안 — 지주와 농민의 등재 기록과 변화』, 해안; 이영호(2018), 『근대전환기 토지정책과 토지조사』, 서울대출판문화원 참조.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2010),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 해안은 「연구의 쟁점과 역정」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발표된 연구 동향, 서평 등을 한데 모아놓기도 했다.

2) 『대한제국의 양전』에 대해서는 광무양안 논쟁의 주요 당사자이면서 저자와 오랜 시간 동안 연구의 관심을 공유해온 미야지마 히로시의 서평 「양전사·양안연구의

2. 책의 구성과 내용

이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광무양안의 실상과 성격을 해명하기 위해 일제시기에 작성된 토지대장과 비교 검토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오래전부터 양안의 성격을 밝히려는 연구가 다수 제출되었음에도 양안의 자료적 성격에 대해 적절히 해명하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기존의 연구들이 대체로 양안과 토지대장을 별도의 글에서 다루는 문제를 지적하고 양안과 토지대장을 함께 다루는 연구를 진행할 때 양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³⁾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비교·검토를 위해 저자는 2009~10년에 걸쳐 문자로만 기록된 광무양안의 내용을 시각적인 위치자료로 변환하여 토지대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장 연구방법론은 JigsawMap이라고 부르는 광무양안과 토지대장 비교 프로그램의 개발 원리와 사용 방법에 대한 소개이다. 저자는 개발한 프로그램을 공개하여 다른 연구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본서 1장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매뉴얼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한다.

토지대장의 토지 파악이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양안과 토지대장을 지적도라는 시각자료 위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양안에 기재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광무양안에 대한 오랜 연구사에서 양안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이 책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시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⁴⁾

새로운 이정표, 『역사와현실』 112가 이미 발표되었다. 미야지마 히로시의 서평을 꼭 먼저 참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 김건태(2010), 「양전과 토지조사사업의 陳田과 ‘主’ 파악」, 『규장각』 37.

4) 책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양안과 토지대장을 비교하는 작업은 연구 초기에 미야지마 히로시에 의해 수행된 바가 있고, 미야지마 히로시의 분석방법론을 적용한 김소

2장에서 4장은 JigsawMap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8개 지역의 광무양안을 분석한 내용이다. 8개 지역 사례는 광무양전의 실상과 성격을 해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① 양지아문과 지계아문 양전의 실상을 비교할 수 있는 연구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이에 따라 양지아문에서 양전을 완료한 지역, 양지아문에서 실지 조사를 실시한 다음 지계아문에서 다시 실지 조사를 실시한 지역, 지계아문에서 양전을 완료한 지역을 선택한다. ② 지역 간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 사례를 선택한다. ③ 인민 구성과 양전 내용의 관련성을 살펴기 위해 인민 구성이 상이한 지역을 선택하여 각성바지 마을과 유명 동성촌락을 함께 살펴본다.

본문 2~4장의 구성은 ①의 구분을 반영하여 2장 「양지아문 양전」, 3장 「지계아문의 재 양전」, 4장 「지계아문 양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②와 ③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적절히 분석 대상 지역이 선택되었다. 2~4장은 각각 독립된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저자가 주목하는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는 소제목들을 붙여 책 전체에 걸쳐 광무양안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에서는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광무양안 연구의 쟁점에 대해 이 책이 제시하는 논점을 함께 덧붙여볼 것이다.

2장 「양지아문 양전」의 첫 번째 소절 <실지 조사>는 첫 번째 분석에 해당하는 만큼, 양안 작성 과정으로부터 양안과 토지대장을 비교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들 전반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우선 양안의 작성 과정을 기존 연구를 활용하여 소개하는데, 대한제국은 실지 조사부

라의 연구가 있다. 미야지마 히로시(1997),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비교연구」,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김소라(2014),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통해 본 광무양전의 성격 — 충남 한산군 창외리와 경북 경주군 구정동 사례 중심으로 —」, 『한국사론』 60 참조. 그럼에도 체계적인 방법론을 마련하고 여러 지역을 동시에 검토하여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양안과 토지대장의 비교를 통해 광무양안의 실상을 분석한 연구는 이 책에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터 문서 작성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중앙에서 장악하고자 했음을 강조하였다.

양안과 토지대장을 비교한 결과는 양안 작성에서 실지 조사 과정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해답을 바로 제공해 준다. 양안에 등재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연계한 결과 양전 실무자들의 양전 경로가 동선이 꼬이지 않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끊이지 않고 연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양전 경로가 확인된다는 사실은 양전 실무자들이 실제로 농지를 따라 걸어 다니면서 조사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토지대장에 등재된 거의 모든 토지가 양안에서 확인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오래된 농지들이 모두 파악되었음을 보여준다.

광무양전사업이 실제 측량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양전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었다. 광무양안이 실척 조사를 통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매년 춘락마다 작성되고 있던 징세장부인 깃기를 바탕으로 한 문서 조사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이다.⁵⁾ 반면에 광무양안이 실척을 통해 작성되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실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양전사업의 의의를 떨어뜨린다고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양전 작성 과정에서 야초책의 기재 양식에 근거하여 실제 측량이 이루어졌음을 논증한 연구가 나오기도 하였다.⁶⁾

저자는 양안의 필지 번호를 따라 양전경로가 꼬이지 않고 확인된다는 사실은 광무양전에서 실지 측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행십책이나 깃기는 부세 수취 과정의 편의를 위해

5) 배영순(1988), 『한말·일제 초기의 토지조사와 지세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2002), 『한말 일제 초기의 토지조사와 지세개정』, 영남대학교 출판부로 출간; 이영훈(1990), 「광무양전에 있어서 <時主> 파악의 실상」,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6) 이영호(1995), 「광무양안의 기능과 성격」,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혹은 착오로 인해 필지가 바뀌는 일이 흔히 있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책상에 앉아 행심책이나 깃기를 토대로 양안을 작성하였다면 양전경로가 뒤죽박죽 섞여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지 조사 과정에 이어 실지 조사 현황을 상세히 소개한다. 조사 현황은 광무양안의 기재양식에 따라 ① 지목과 전형, ② 절대면적, ③ 두락, ④ 등급, ⑤ 시주와 시작으로 나누어 설명되는데, 실제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가 담담하게 제시되는 가운데 앞서 살펴본 실지 측량 여부와 마찬가지로 광무양안 연구의 주요 쟁점들이 그 안에 함께 녹아 있다. 여기에서 검토한 내용은 뒤에서 다른 양안들을 분석할 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확인되므로 중요한 사항만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전 양안과 달리 광무양안에 그림으로 기재된 전답 모양의 의미를 검토한다. 광무양안에서 전답의 형태를 그림으로 기재한 것은 기존 연구에서 필지의 모양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면적을 척수로 표시하고 절대면적을 기재한 것과 함께 토지의 객관적 실체에 대한 파악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이해되었다.⁷⁾

저자는 광무양안의 전형에 대해 필지의 객관적 모습을 모사한 것이 아니라 양전 실무자들이 전답 면적을 구하기 위해 측량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머릿속에서 그린 모양이라고 설명한다. 양안에 기재된 장광척수를 지적도 상에 표시하면 양안에 기재된 길이의 대부분이 지적도에서 찾아지는 동시에 기재된 전형 그대로를 지적도상에 도저히 얹힐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양전 실무자들이 실지 측량을 하였다는 근거이면서 양안에 기재된 전형이 농지 모양을 실제와 비슷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전답 면적을 구하기 위해 측량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그려놓은 것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전답모형을 그림으로 그려 기재한 것이 이전 양안에서 전형을

7) 이영학(1991), 「광무양전사업 연구의 동향과 과제」, 『역사와현실』 6.

글로 적은 것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다. 중국 어린이도책과 일본 검지장에는 전답모양을 글씨로 나타낸 부분이 없으며, 도형의 형태로 전형을 표현하면 어린이도를 그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광무양전 기획자들은 처음부터 어린이도 작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형이 그림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안의 성격이 변화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전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광무양안이 이전 양안과 달리 개별 필지의 절대면적을 기재해 놓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정부는 양지아문 양안을 토대로 소유권 증빙 장부가 되는 지계아문 양안을 작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면적을 기재했고, 면적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은 소유권과 관련된 의식이 이전 시기보다 한층 강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토지대장과의 비교를 근거로 개별 필지의 경우 실제 면적과 오차가 꽤 큰 경우가 많으며, 면적 파악율이 지역과 지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지목의 경우는 양안과 토지대장 사이에 거의 변화가 없어 양안의 지목이 당시 실상을 비교적 잘 반영했다고 판단하였다. 등급의 경우는 반대로 토지조사사업의 등급과 상관관계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당시 농촌 현실과 적지 않은 괴리가 있었다고 보았다. 시주와 시작은 토지대장과의 비교를 통해 양안에 기재된 정보가 당시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욱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2장의 두 번째 소절 <인민의 관심>은 앞 절의 검토를 토대로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금산리 사례를 통해 광무양안의 성격을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한다. 우선 양안과 토지대장을 비교한 결과에서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양전 경로가 확인되는데, 여기에서는 양전 실무자들이 현장 조사를 할 때 목측에 의존함으로써 방위를 간혹 착각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추가

된다. 골짜기 혹은 산기슭에 위치하거나 개울을 건너는 등 지형지물로 방위로 판단하기 어려운 곳에서 양전 방향을 기록할 때 직관에 의존했기 때문에 방위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실측이 이루어졌다는 또 하나의 근거인 동시에 당시 사람들이 상대적 방위체계와 절대적 방위체계를 자유로이 넘나들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였다.

방위의 착각에도 불구하고 양전 실무자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당시 경작되고 있던 숙전을 빠짐없이 양안에 등재했다. 토지대장에 등장한 토지 가운데 간혹 양전에서 제외된 전답도 있었지만, 대개 개울가 근처에 위치해 자주 수해를 입던 작은 땅땀기 또는 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산성이 불안정한 산기슭 주변 농토였다.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광무양전 당시 농촌은 한해와 수해 탓에 버려져 진전으로 방치된 곳이 거의 없이 매우 안정적이었다고 이해한다. 뒤에서도 양안과 토지대장에서 서로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통해 광무양전 당시의 개간 상황을 추정할 수 있음이 계속 언급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결부 산출과 사람 파악에 대한 설명은 앞 절의 실지 조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더욱 발전시켜 광무양안에서 국가와 국민의 주요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부세량과 직결되는 결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등급이 결정되고 면적을 파악해야 한다. 양전 실무자들은 토지 비옥도와 토지 이용율 등을 참작하여 등급을 결정하였다. 논과 밭에 비해 택지[垓]에서 등급을 높게 책정한 것이 매우 인상적인데, 이러한 판정은 조선후기 이래 관행이었다고 한다. 양안과 토지대장을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조사부의 면적에 대하여 양안에서 파악한 면적의 비율인 면적 파악율을 구해 보면 63.6% 정도로, 양안에 기재된 토지면적은 실제보다 상당히 축소된 것이었다. 또한 면적 파악율은 지목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논이 가장 높고 택지가 논의 1/2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적게 파악되었다.

저자는 지목에 따라 면적 파악율이 다른 현상을 정부가 균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지목에 따라 면적 파악율을 적절히 조절한 데에서 비롯되

었다고 해석한다. 택지의 면적 파악율이 가장 낮은 원인은 곡물이 생산되지 않은 집 자리와 마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이며, 밭보다 논의 면적 파악율이 더 높은 까닭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논의 밭에 비해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밭의 면적을 좁게 잡아야만 결부가 적어지고, 나아가 세금도 적게 내게 된다. 측량 기술이 낮아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논과 밭의 면적 파악율이 너무나 이질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양전 과정에서 균세를 실현하기 위해 파악율을 조절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높다고 보았다.

양안에 등장하는 시주와 시작에 대한 해석은 광무양안 연구의 핵심적인 쟁점이다. 광무양안에 대한 연구를 개척한 김용섭은 광무양안에 등장하는 시주를 토지의 소유주, 시작을 소작인으로 해석하여 시주와 시작을 지주-소작관계로 전제하고 농민층의 토지소유와 차경 실태를 분석하였다.⁸⁾ 이에 대해 이영훈은 양안과 호적 및 족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양안의 시주는 다양한 명칭으로 대록(代錄)·분록(分錄)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농가세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시주와 시작을 소유와 경영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⁹⁾ 나아가서는 소유자와 경작자의 파악에 관한 한 양안은 사실상 허부와 다름없다고 평가하였다.¹⁰⁾

시주와 시작에 대한 이해는 광무양안의 성격과 양안을 근거로 이루어진 농촌 현실에 대한 분석의 토대를 좌우하는 문제인 셈이다. 그럼에도 논쟁 초기 이영훈의 사례 조사와 개념 분석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논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책은 양안과 토지대장을 연결하여 비교하는 방법론을 통해 시주와 시작의 실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8) 김용섭(1968), 「광무연간의 양전사업에 관한 일연구」, 『아세아연구』 11-3(2004), 『신증 증보판 한국근대농업사연구 II』, 지식산업사에 「광무연간의 양전·지계사업」으로 재수록.

9) 이영훈(1990) 앞 논문; 이영훈(1992), 「광무양안에 있어서 ‘時主’ 파악의 실상(II)」, 『성곡논총』 23.

10) 이영훈(1989), 「광무양전의 역사적 성격」,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비봉출판사.

는 점을 보여준다.

양안과 조사부에서 시주명과 소유자명이 일치하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필지가 많다. 시주 1인의 토지가 조사부에서 1명의 소유지로 되는 사례가 많은데, 저자는 이 경우의 시주명은 당시에 호명(戶名)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소유자 혹은 마름의 호명이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당시 마을 거주민의 성격에 대한 이해 위에서 양안과 조사부의 비교를 통해 합록·분록·대록의 사례들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무양전 당시 땅 주인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 호명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호명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주명으로 자신의 실명·호명·자(字), 사망한 조상의 이름, 마름의 호명 등을 사용하더라도 토지소유권 행사에 하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광무양안에 등재된 시주명의 성격이 다양했다고 하더라도 지역민과 서원배들은 그 땅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양안에 등재된 시작의 성격 역시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작인 가운데는 양안에 시주로도 올라있고, 조사부에서 소유주로 확인되는 사람도 있다. 기존 연구처럼 모든 시작을 차경인으로 해석하게 되면 자신의 땅 상당부분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자신은 타인의 땅을 차경하는 셈이 되므로 모든 시작을 차경인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양안에서 시작이 기재되지 않은 토지 또한 모두 자작지였던 것도 아니다. 마름이 시주란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그가 차경하던 필지의 시작란은 공란으로 남게 된다. 저자는 이들이 시작으로 기재된 까닭은 차경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필지의 납세자였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다.

저자는 양안에 등재된 시주명과 시작명이 대부분 호명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실명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양안 등재에서 납세명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은 광무양전의 일차 목적이 부

세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동시에 토지대장과의 비교를 통해 실제 소유주와 경작인의 실상을 추론할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기에는 사례가 매우 다양함을 보여주었다.

3장 「지계아문의 재 양전」은 양지아문에서 양전을 했다가 이후 지계아문에 의해 다시 양전이 이루어진 지역의 사례를 다룬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양지아문과 지계아문 양전의 차이와 함께 광무양전사업의 일차적인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3장에서 다루는 지역 사례는 권세가와 왕실이 각각 양전사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였는지와 결부량을 통한 전세 책정에서 다른 부세량을 참작하던 전통이 계승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경기도 용인에서 광무양전 결과 결수가 크게 늘어난 데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인민들을 달래기 위해 양전을 다시 실시하였다. 따라서 지계아문에서 다시 실시한 양전의 목표는 양지양전에서 확보한 결부총액을 줄이는 것이었다. 양지양안과 지계양안을 비교해보면 등급은 거의 변하지 않은 대신, 전답의 면적이 크게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 양전의 과정에서 인민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면적을 축소시켜 결부를 줄였다는 사실은 광무양전의 목적이 토지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루결을 파악하는 데 있었음을 보여준다.

면적을 축소시켜 결부를 조정하였다는 차이 외에도 지계양안에서 양지양안 필지 일부의 방위를 수정하였다는 사실로부터 지계양전 당시 양전 실무자들 역시 현장 조사를 진행했음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가운데 택지 36필지 모두를 밭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계양안에서 택지를 대개 밭으로 파악했다는 사실은 4장에서 지계양안의 성격을 규명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아울러 지계양안에서 전형 대부분이 수정되었다는 점은 양안에 기재된 전형이 면적 산출을 위해 주관적으로 선택된 것이라는 사실

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하였다.

3장의 사례에서는 양안과 조사부에 등재된 토지를 개별 필지별로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적인 분석을 제시한다. 이 지역에는 중앙정부에서 큰 권세를 누리던 오씨 일가가 거주하였다. 조사부에 올라있는 전답 가운데 필지 기준으로 46.5%, 면적 기준으로 23.4%에 해당하는 땅이 양안에 확인되지 않는데, 이와 같은 누락율은 다른 마을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한다. 양안에서 확인되지 않은 토지 대부분은 산기슭에 위치하지만, 미등재 토지 모두가 짧은 시간에 개간되었다고 보기에는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미등재지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은결로 보아야 한다. 권세자들이 정부가 은결을 색출하는 과정에 실력을 행사해 적지 않은 토지를 여전히 은결로 남겨놓았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 지역에는 둔전이 넓게 분포하는데, 둔전과 연결된 조사부 전답 소유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세를 줄이기 위해 권세자들이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계양안에 등재된 둔전 77필지는 조사부 전답 99필지와 연결되는데, 모두 개인 소유지로 국유지가 전혀 없다. 저자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 토지들은 애초에 개인 소유지이며, 지계양안에 등재된 둔전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자신들의 전답을 둔전에 소속시킨 이른바 투탁둔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둔전 시작인 중 다른 토지에 시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다수 나타나는 현상은 시작으로 기재된 이들이 둔전의 실제 소유주였음을 보여준다. 이들 가운데는 민전의 시작으로 등장하는 사례도 보이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양지양안에서 시작의 성격이 매우 복잡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지계양안에서 파악한 이 지역 민전의 면적 역시 실제 면적의 56.4%에 불과하여 광무양전 당시 다른 마을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권세자들이 마을에 거주하면서 중앙과 지방에 실력을 행사하여 토지의 상당 부분을 은결로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권세자들이 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전과정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구체적인 양안의 실증을 통해 보여준다.

3장의 후반부에서는 양지아문 양전 때 많은 전답이 누락되었다가 지계아문에서 새로 양전이 이루어진 경기도 광주 사례를 통해 왕실의 대응 양상을 분석한다. 광무양전사업에서 국유지를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양안에 어떻게 기록하였는가라는 문제는 연구 초기부터 과제로 제기되어 이후 몇 편의 연구성과가 제출되었다.¹¹⁾ 여기에서 분석하는 왕실 소유지의 양상은 앞 절에서 다룬 둔전 사례와 함께 광무양안에서 국유지의 실상에 대한 연구로 이해할 수 있다.

사례로 분석한 경기도 광주 연주면 청담리 조사부에는 국유지가 많이 등재되어 있는데, 국유지 가운데 양지아문에서 작성한 양안에 올라있는 땅은 23.4%에 불과하며, 양안과 연결되지 않은 조사부 땅 대부분은 국유지이다. 지계아문에서는 양지아문 양전 때 누락된 왕실 소유지를 조사하여 『선릉정릉위도양안』을 작성하였는데, 저자는 선릉과 정릉의 위도 대부분이 연주면 양지양안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왕실이 누락된 곳을 조사하여 정리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지계아문에서 그곳을 양전하였던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왕실이 광무양전을 통해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려고 했음을 의미하는데, 인민들이 부세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과 달리 왕실은 소유문제에 관심을 두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 지역 사례를 통해서도 양전 과정에서 전세정책의 전통이 계승되고 있었다는 흥미로운 분석도 제시된다. 경기도 청담리의 면적 파악율은 경기도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 충청도 사례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광무양전 때 경기도와 충청도의 면적 파악율이 크게 차이 나는 까닭을 부역 부담이 큰 경기도에 대해 전세 부담을 덜하게 하

11) 박진태(1997), 「갑오개혁기 국유지조사의 성격」, 『사림』 12·13; 이영호(1997), 「대한 제국시기 국유지의 소유구조와 증답주」, 『한국 근현대의 민족문제와 신국가건설』, 지식산업사.

여 부세 부담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 면적 파악율을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해석한다. 광무양안에는 전세량을 결정할 때 다른 부세량을 참작하던 전통이 녹아 있었다는 것이다.

4장 「지계아문 양전」은 양지아문에서 양전이 완료되지 않았다가 지계아문에서 양안 작성을 마무리한 지역 사례를 다룬다. 양지아문과 지계아문 양전의 차이를 다시 한 번 비교하는 한편 지계아문에서 발행한 관계의 성격을 검토한다. 마을 주민 구성의 차이가 양전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경상도와 다른 도의 면적 파악율 비교를 통해 조선후기 전세정책이 광무양전에 계승되는 양상 또한 분석한다.

<조선시대 소유권 증빙제도 계승>이라는 제목을 붙인 4장의 전반부는 지계아문 양안의 특징과 관계의 성격을 상세하게 다룬다. 양안과 토지대장을 비교해보면, 지목이 변경된 필지 대부분은 양안에 받으로 등재된 곳이 토지대장에서 택지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계아문 양전 때 택지를 받으로 파악한 곳이 많았음을 의미하는데, 저자는 이것이 지계아문이 양지아문에 비해 부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한다.

지계아문 양안에서 시주 파악 방식도 양지아문과 차이가 났다. 지계아문에서는 야초를 토대로 중초본을 작성하면서 시주만 옮겨 적었는데, 여러 사례를 종합해볼 때 납세지를 시주로 기록한 것으로 보았다. 지계아문은 지주가 납세하는 전답은 지주를, 작인이 납세하는 땅은 작인을 시주로 등재했다. 시주명을 통해서도 지계아문이 양지아문에 비해 부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음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지계아문 시주의 실체가 납세자였다는 사실은 지계아문에서 발급한 관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양안과 호적의 인명을 함께 검토해보면 일치율이 매우 낮아 사실상 두 장부가 전혀 연계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대한제국은 양안과 호적을

연동시키려는 계획이 없었고, 양전 실무자들도 시주명을 기재할 때 호적을 전혀 참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또한 호적과 거의 무관한 장부라고 이해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누구도 두 장부를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광무양전 기획자들 역시 양안 시주명과 호적 이름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았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양안에 근거해서 발행되는 관계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입안과 같은 계통의 문서라고 결론을 내린다.

김용섭이 광무양안의 근대적 성격이 관계 발급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 이래로 지계아문 양안과 지계아문이 발급한 관계의 성격에 대한 이해는 광무양안 연구에서 첨예한 쟁점을 형성하였다. 지계양안과 관계에 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광무양안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와도 직결되는 문제였다.¹²⁾ 광무양안의 근대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양지아문 양안에서부터 관계 발급이 기획되었다는 견해와¹³⁾ 지계아문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관계 발급 구상이 드러났다는 견해¹⁴⁾ 사이에 차이가 있었어도 지계아문 설립에 이르러 토지소유권 확인이 양전사업의 중요한 목표였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다. 반면에 광무양안의 근대적 성격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양전사업은 지세징수를 유일한 목적으로 행하였으며, 설사 토지소유권 확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였다고 비판하였다.¹⁵⁾

양안과 호적의 관계에 대한 이해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 광무양전사업에서 토지소유권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광무양전이

12) 김용섭(1968) 앞 논문.

13) 왕현중(1995), 「대한제국기 양전·지계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격」,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이러한 입장은 왕현중(2016),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과 양안-지주와 농민의 등재 기록과 변화』, 혜안에서도 확고하게 드러난다.

14) 이영호(1995) 앞 논문.

15) 각주 9)와 같음.

근대적 토지개혁을 지향하였다면 또 하나의 핵심적인 공부대장인 호적도 함께 바뀌어야 함에도 이 시기 양안과 호적이 전혀 조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였다.¹⁶⁾ 반면에 근대적 성격을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양전 초기 구상에 토지소유자, 지세부담자, 호세부담자, 작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삼아왔다.¹⁷⁾

이러한 논쟁의 맥락을 고려하면, 지계아문 양안이 양지아문 양안에 비해 부세에 더 큰 관심을 가졌으며, 지계아문 양안의 시주와 호적은 전혀 관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애초에 양안과 호적을 연계시키려는 기획과 의도 자체가 없었고, 관계가 입안과 동일한 계통의 문서라는 지적은 매우 당혹스런 주장인 셈이다. 동시에 관계가 소유권을 증빙하는 문서가 아니라거나 양안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지도 않는다. 관계에 대한 이해는 광무양안 논쟁에서 저자의 입장의 독특함을 대변한다.

4장의 후반부 <조선시대 전세정책 계승>은 관계에 대한 분석에 이어 조선시대의 전통이 지계아문의 양안으로 계승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세정책의 차원에서 검토한다. 산청군에서 양반 동성촌락을 대표하는 마을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각성바지 마을의 사례를 비교하여 양반들에게 부세를 상대적으로 험하게 부과하던 조선시대 부세정책의 실상을 보여준다. 양반들이 모여 사는 마을의 면적 파악율이 평범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비해 크게 낮다. 저자는 양반 동성촌락의 부세를 상대적으로 험하게 부과하기 위해 양전 실무자들이 의도적으로 면적 파악율을 더 낮추었다고 이해하였다.

그런데 산청군 각성바지 마을의 면적 파악율은 같은 지역 양반 동성촌락에 비해서는 높지만 충청도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다고 한다. 경상도 면

16) 위와 같음.

17) 각주 13)과 같음.

적 파악율을 충청도에 비해 크게 낮춘 이유는 조선시대 부세정책 때문이라고 보았다. 경상도는 곡물을 서울까지 운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운송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전답 면적을 실제대로 양안에 기재하게 되면 경상도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부세를 부담하는 셈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도 지역의 전답 면적을 실제보다 축소해서 양안에 등재하여 경상도 지역 전세가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동일한 면적의 실제 부담액이 전국적으로 엇비슷하도록 조정하였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두 가지 분석을 통해 신분제와 현물납이라는 조선시대 부세제도의 특징이 광무양안에 여전히 지속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3. 연구의 구체적 의의와 추상적 질문

이 책은 이미 광무양안사 연구의 오랜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양안 분석에 근거해서 여러 개의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였다. 광무양안이 실측에 의해 당시의 토지 상황을 상당히 정확하게 반영하였으며, 양안에 기재된 전형 그림은 실제 농지를 모사한 것이라기보다 측량을 위해 주관적으로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새로 밝혔다. 절대 면적과 장광척수가 기재되었지만, 실제 면적 파악율은 양안 작성 과정에서 여러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출된다는 사실을 통해 광무양전사업의 일차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또한 양안에 등장하는 시주와 시작은 그 실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과 함께 소유와 경작의 실상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보여주었다. 양자야문 양안과 지계야문 양안의 차이와 관계 발급의 성격에 대한 견해도 제시하였다. 광무양전사업에 조선후기 이래 부세정책의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연대기 자료를 통해 유추되던 국가와 농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은루결과 투탁, 결부 책정 등을 둘러싼 복잡한 이

해관계를 실증하였으며, 진전의 존재와 개간 진척도 등을 통해 광무양전 전후 농촌 상황의 안정성을 추론한 것도 매우 흥미롭다.

구체적인 성과들이 이렇게 이미 상당하지만, 이 책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광무양안이라는 한국사 고유의 귀중한 자료를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안과 실례를 제시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광무양안에 대한 연구는 오랜 연구사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실상과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근거를 두지 못한 채 검증되지 않은 전제들에 기초한 분석을 답습하거나, 이와 반대로 자료의 성격에 대한 선부른 단정에서 양안을 활용한 모든 분석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악순환에 머물러왔다. 이 책은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비교를 통해 광무양안에 담긴 정보의 내용과 성격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밝히고 이를 활용하여 당시의 농촌과 농업의 실상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제시함으로써 광무양안에 대한 연구와 광무양안을 활용한 연구를 모두 새로운 기초 위에 올려놓았다. 광무양안 연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야말로 무엇보다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

구체적인 분석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연구의 가장 큰 의의를 고려하면 이러한 사항들을 지적하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연구의 관점과 전제에 대한 추상적인 질문 한 가지만을 던져보려고 한다. 이 책에서 광무양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비교를 통해 비로소 가능해졌다. 그렇다면 광무양안과 토지대장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이 책의 결론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 책은 서론에서 이미 광무양안 논쟁의 기본 대립구도를 이루는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근대성 담론으로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광무양전의 근대성을 주장하는 입장은 한국 역사도 서구와 비슷한 경로를 밟았을 것이라는 ‘서구중심주의 사관’에 입각해 있으

며, 반대로 이를 비판하는 입장은 도리어 근대를 절대시하고 전근대는 근대에 비해 후진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근대지상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광무양안에서 근대성을 찾는 입장을 비판하면서 광무양안이 조선이 걸어 온 역사적 경험의 연속적인 산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같은 사실을 근거로 근대적 토지조사사업에 비해 후진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통 혹은 전근대와 근대는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반박한다. 양안에 내재된 전통시기의 역사상을 재구성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깊은 공감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전통시대의 역사적 산물로서 광무양안의 고유한 성격을 강조하고 나면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책은 결론에서 본론의 분석을 근거로 광무양안에서 토지대장으로의 전환은 통념과 달리 우리의 역사적 경험(器 = 氣)에 서구적 원리(道 = 理)가 더해져서 동기서도(東器西道 = 東氣西理)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동도서기가 아니라 동기서도라고 표현한 것은 광무양안과 토지대장 사이의 단절적인 성격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비교를 통해 광무양안의 내용과 성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결론을 통해 광무양안과 토지대장 사이의 질적인 전환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이 만약 질적으로 다른 역사적 조건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이들을 비교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난점은 이 책의 결론에 대해 미야지마 히로시가 내놓은 반론이 잘 보여준다. 광무양안과 토지조사사업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견지해온 미야지마 히로시는 “이 책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대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며, 그것은 바꿔 말하면 두 개 장부의 연속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책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전통과 근대를 대립적으로 보는] 저자의 견해와 반대로 한국에서 토지조사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⁸⁾ 미야지마 히로시와 달리 광무양안의 근대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이 비교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자의 견해와 반대로 광무양안에 이미 토지대장과 다를 바 없는 근대적인 수준의 성취가 이룩되었다는 근거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양안과 토지대장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장부라는 점에서 아무리 질적으로 다르다고 해도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억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책의 추상적인 결론을 핑계로 서구와 근대의 역사적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만큼이나 전통의 고유성을 그 자체로 인식하자고 하는 관점 역시 근대로의 전환이라는 실재하는 역사적 경험 앞에 쉽지 않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단상을 적어 보았다.

18) 미야지마 히로시(2019) 앞 논문, p. 378.

